

대학가도 고물가 불똥... 학생 90% “개강 후에도 알바할 것”

대학생 1812명 대상 설문조사
1학기 알바 계획 58%, 여름방학 67% 알바 목적에 ‘물가인상’ 2위로 진입
서울대·중앙대 학식가격 오르고 고려대·외대 등도 가격인상 예고
학생들 “어디를 가도 밥값 비싸 지출 줄이고 직접 요리해 먹을 것”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식 가격 인상 반대 및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고물가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개강 후 학업에 집중하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구직에 한창이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식비 부담이 꼽혔지만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학생식당 음식가격도 인상돼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개강이 시작됐음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아 대학생들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먹거리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학식의 가격도 올라서는 ‘가성비 학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자리 플랫폼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1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 89.5%가 2학기 아르바

이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기 조사 결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학기 및 올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근무 여부를 조사하자 1학기 57.6%, 여름방학 67.3%의 응답률을 보였다. 2학기 근무 계획 기록의 89.5%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9%, 22.2%로 높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지난 1학기, 여름방학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2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학기 동일 조사에서는 국내 여행, 콘서트 등 ‘문화·여가 생활’과 ‘해외 여행’에 대한 응답이 올라갔었지만 2학기에는 ▲용돈이 부족해 스스로 추가적인 용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71.6%, 복수 응답)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33.5%)이 1, 2위를 차지했다.

개강을 했음에도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신의호(20)씨는 “물가 상승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통학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밥값이 비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정이현(20)씨 역시 “버는 돈은 똑같은데 소비 비용은 늘어 일을 더 많

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을 크게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들의 출하량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식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으로 대학생들의 학식도 인상되면서 대학생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대·중앙대 등은 이미 한 차례 학식 가격을 인상했으며 고려대·한국외대는 이달부터 학식 인상을 예고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7일 용

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식 가격 인상 반대와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전대넷은 “학식은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며 “학생 67%가 3000원대 학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평균 5500원 수준으로 높게는 7000원까지도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천국 조사에서도 대학생 10명 중 9명(90.0%)은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요인은 외식, 배달음식, 식재료 등 ‘식비(91.1%, 복수응답)’이 꼽혔다. 물가 인상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통한 소득 증대(72.3%, 복수응답)’가 1위, 2위로는 외식, 배달 등 식비 줄이기(61.6%) 순이다.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노한빈(24세)씨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태로 개강을 하게 돼 걱정이 크다”며 “바깥 지출을 줄이고 직접 요리해 먹는 등 식비 줄이기에 나설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씨는 방학때까지는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교 근처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별로 없어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교육위 쥐꼬리 예산에 ‘교육 홀대론’ 재점화

내년 예산안 88억9100억 편성
방통위 493억, 인권이 406억 등
유사 위원회 대비 현저히 적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국교위(3과 31명)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29억5300만원, 기본경비 23억3500만원, 운영지원비 36억3000만원 등 총 88억9100만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3과 281명) 493억23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4과 250명) 406억9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4과 163명) 585억2400만원 등 다른 유사 위원회에 비해 현저히 적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교위 조직 규모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는 현재 3과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사 위원회와 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교해 턱없이 부족한 조직 규모이다. 방통위는 3과 281명, 인권이 4과 250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과 16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는 국회가 추계했던 국교위 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론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교위에 3과 13과 95명을 측정해 152억2200만원의 예산 규모를 산출한 바 있다. 추계와 비교했을 때, 조직 규모는 3국이 아닌 3

과, 예산은 겨우 절반 수준이다. 국교위의 조직 정원부터 예산까지 다른 유사 위원회와 상당히 차별된 편성으로 인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 21명이고 전문위원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 등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윤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고려대,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발

정연돈 컴퓨터학과 교수 연구팀
세계최고수준 시스템 성능 보여

고려대학교는 정연돈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최적의 성능을 찾아서 동작하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특히 움직임이 불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시스템을 개발한 정연돈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연구팀은 해당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

인다고 전했다.

근래에 움직이는 물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물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계 학습 모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 중 하나인 VLDB 2022에서 발표됐다. /신하은 기자

단국대, 과학기술 석·박사 양성 나선다

‘지역 과학기술 실용화 사업’ 현판

단국대학교가 최근 전국의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선정 대학을 대표해 현판식을 갖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를 앞당길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과학기술 실용화에 나섰다.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STAR-Academy : Science and Technology Acceleration for Region + Academy)’의 핵심은 지역의 강점 기술과 산업분야를 접목한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확산에 있다. 단국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일반대학원에 과학기술정책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지역이 보유한 과학기술 성과의 활용과 확산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과학기술 실용화대학원’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 정책융합학과는 2027년까지 68억원의 국고사업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첨단기계 분야의 기술 실용화를 주도할 연간 40여 명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신하은 기자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참가자 모집

명지전문대, 22일까지 접수

명지전문대학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맞춰 선도적인 온라인 ‘미디어커머스형’ 창업 모델 개발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서울특별시 전역의 창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20개팀이며, 모집기간은 22일 오후 5시까지이다.

모집분야는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비즈

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 컨설팅, 촬영 및 편집, PT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과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이 지원된다. 총 1700만원의 시상금도 수여될 예정으로, 선정되는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팀은 2022년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2022년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사업계획서(10P 이내), 2022년 미디어커머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대표자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및 팀원 인당 1장씩)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